

충남 경제의 현재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세미나

2013. 4. 8.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백운성 책임연구원



충남경제의 현재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CONTENTS

01_ 충남경제의 성장과 현재

02_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03_ 새정부의 정책과제와 충남의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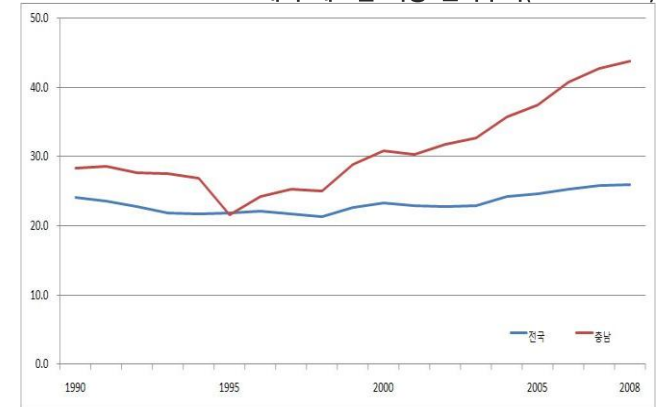


1. 충남의 경제성장 과정

수출제조기반 중심의 산업성장

- ▶ 1990 ~ 2010 GRDP 성장률 : 8.15% (전국 5.2%)
- ▶ 전국대비 충남비중 7.1% (75조 6065억원)
- ▶ 수출 599억달러(전국10.8%), 수입 366억달러(전국 6.4%)
 - 수출입을 포함한 대외의존도 125%
 - 주요수출 : 반도체(30.2%), 평판디스플레이(22.5%)
 - 주요수입 : 원유(42.6%), 석탄(12.5%), 석유제품(11.1%)

GRDP대비 제조업 비중 변화추이(1990~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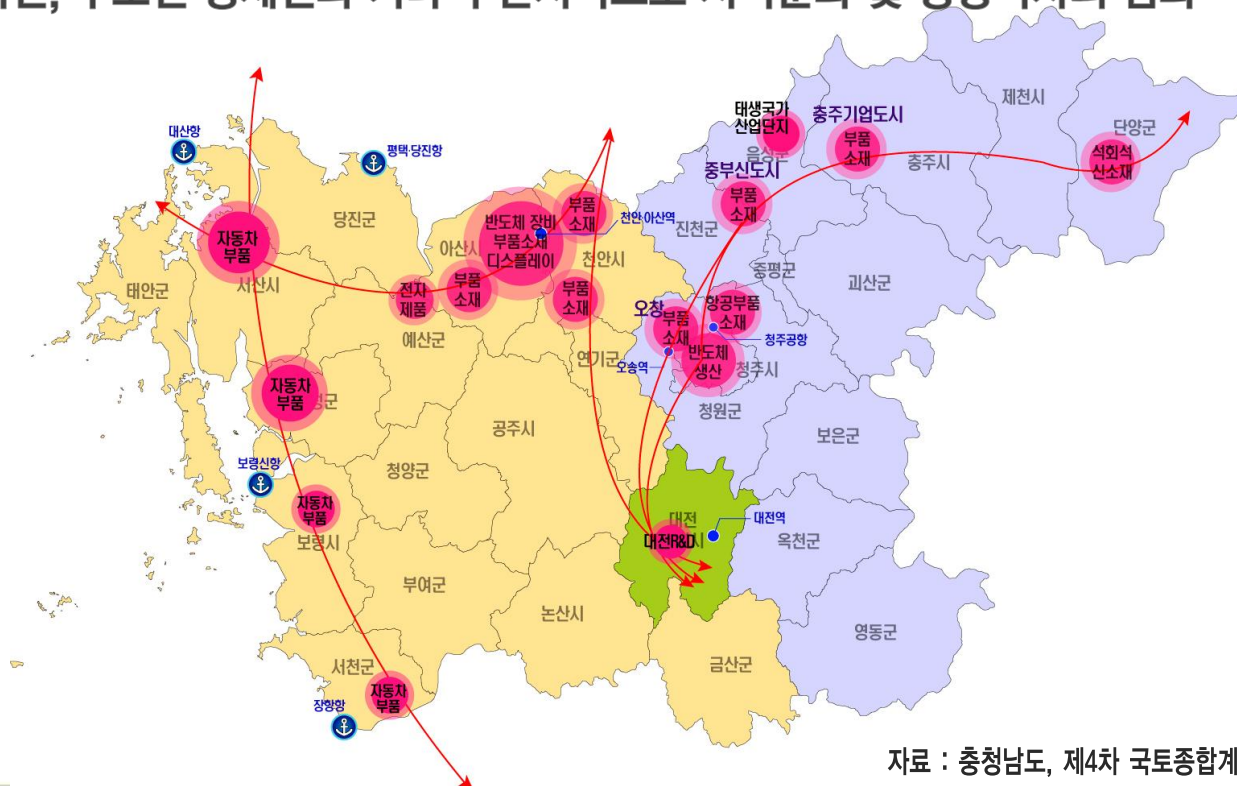
충남의 주요 산업입지

- ▶ 1990년 대산석유화학단지 조성(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등) *3대 석유화학단지 조성
 - * 중국 및 수도권과의 인접성, 대산, 당진, 평택항 등의 SOC
- ▶ 1994년 현대자동차 (아산), 동희오토 등 자동차 산업 집적화
 - * 완성차(현대 30만대, 기아 22만대), 엔진 85만대
- ▶ 2001년 삼성코닝 정밀유리공장 및 삼성디스플레이(탕정)
 - * 디스플레이 전세계 46.6% 생산
 - * 충남 대형LCD 52.3%, PDP 59.9%, 중소형 LED 75.3%, OLED 99.7%

2. 충남경제의 성장 변화

산업의 성장과 확산에 따른 지역내 성장 격차의 심화

- ▶ 대규모 기업 및 협력업체 중심의 산업집적, 수출중심형 산업구조, 지역의 높은 이입이출구조
- ▶ 산업집적 및 확산이 고속도로 및 주요국도 등으로 연결되는 경로의존적(Path dependency)패턴
- ▶ 대전도시권, 수도권 경제권과 기타 주변지역으로 지역분화 및 성장격차의 심화



자료 : 충청남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

3. 충남 시군별 경제현황

시군별 GRDP : 북부권(4) 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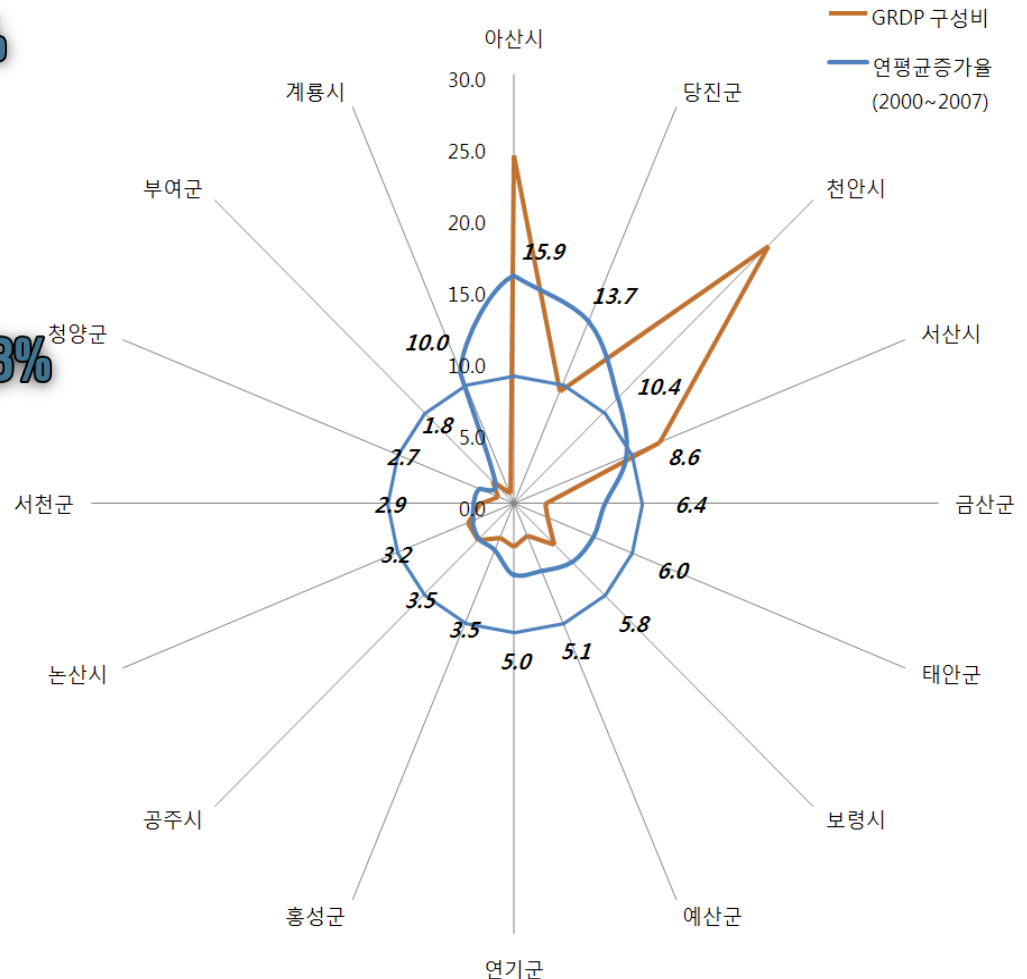
- ▶ 천안 24.7%, 아산 22.7%
- ▶ 서산 12.0%, 당진 8.7%
- ▶ 기타 12개시군 31.9%

200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9.3%

- ▶ 북부권 중심의 성장세 강화
- ▶ 낙후지역 성장률 5%미만

주민세의 소득세할

- ▶ 충남평균 34.5천원(전국 30.5천원)
- ▶ 아산(73.1), 천안(63.5), 서산(52.6)
- ▶ 기타지역 30천원 이하



4. 충남경제의 현재

수출기반의 제조기반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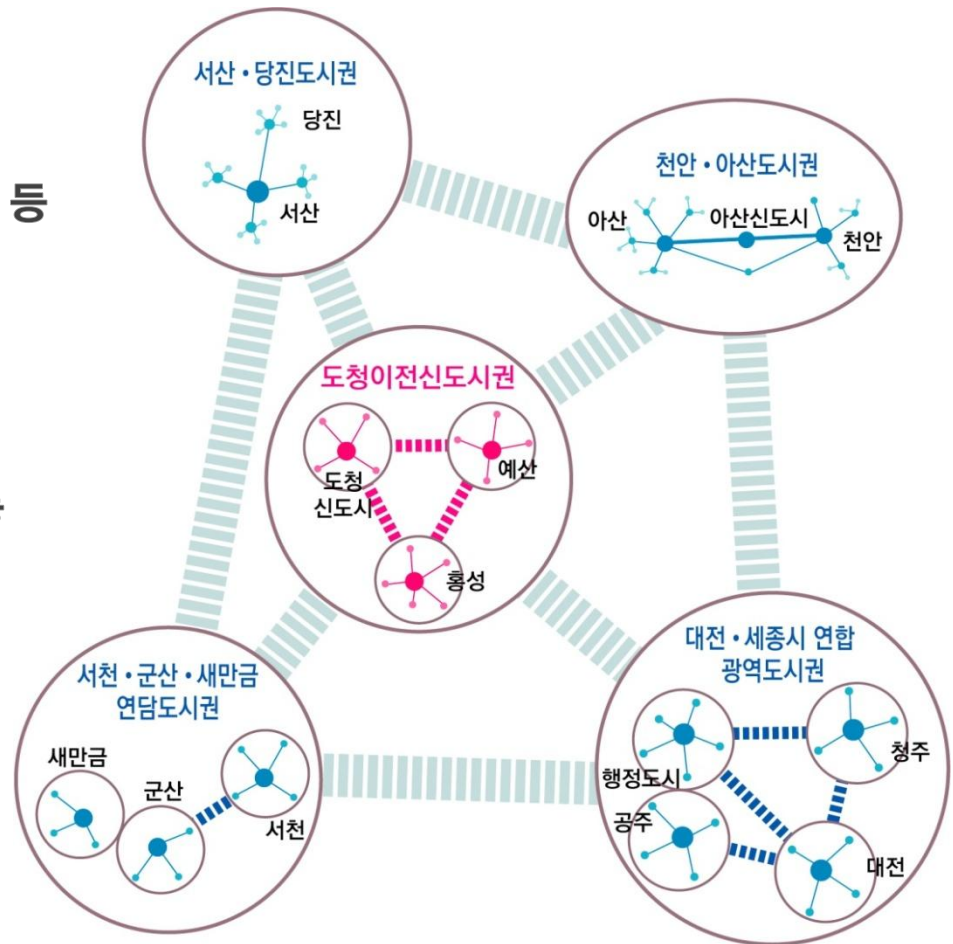
- ▶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불안정한 성장
- ▶ 수출중심 대기업 중심형의 산업구조
- ▶ 대-중소기업의 격차, 제조-서비스업 격차 등

지역간 격차 심화 및 분화

- ▶ 지역의 분화로 인한 지역의 이해관계 심화
 - 수도권중심 - 천안아산, 서산당진
 - 대전,세종연합 - 금산, 공주, 논산, 계룡
 - 군산새만금 - 서천, 보령
- ▶ 지역의 경쟁과 균형발전의 문제

지역 산업/과학기술정책의 위기

- ▶ 전략산업 -> 광역 선도산업
- ▶ 신 특화산업(5개)의 육성
- ▶ 지방주도형 과학기술정책 제한





1.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분야	현재	미래
국정중심	선진국 추격형	세계시장 선도형
경제성장 모델	선진국 추격형	▶ 세계시장 선도형
	투입 중심 양적 성장 (경제성장률)	▶ 생산성 중심 질적 성장 (고용률)
	수출·제조업·대기업 중심 불균형 성장	▶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 균형성장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	▶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
사회발전 패러다임	(성장 → 복지) 단선적 인과관계	(성장 → 복지) 순환관계 인식
	물리적 자본 중시 (사회 기반시설)	▶ 사회적 자본 중시 (신뢰 공동체)
	안전 불감증	▶ 안전 제일
정부운영 방식	정부 주도·민간 순응	▶ 민관협치·소통
	정책집행 중심	▶ 정책평가 중심
	부처 간 칸막이	▶ 부처 간 협력

노무현정부(2003~2008)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계획/지역발전계획
시도별 전략산업육성
혁신도시/기업도시

이명박정부(2008~2012)

녹색성장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권역별 선도산업/거점대학육성
4대강 살리기

박근혜정부(2013~2018)

창조경제

?



2. 박근혜정부의 국정방향

박근혜 정부의 국정키워드 :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경제부흥

- ▶ 창조경제 : 과학기술과 IT산업, 융복합형 인재
- ▶ 경제민주화 : 공정한 시장 질서, 중소기업 중심

국민행복

- ▶ 국민맞춤형 복지
- ▶ 창의교육과 능력 위주의 사회
- ▶ 안전한 사회와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문화 융성

- ▶ 융합된 콘텐츠 산업 육성
- ▶ 생활속의 복지, 문화가 있는 복지
- ▶ 세계가 하나되는 문화 등



3. 창조경제의 핵심요소

새정부의 창조경제 비전 및 핵심요소

- ▶ 창조경제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과 국민행복 실현
- ▶ 생태계, 벤처/중소기업, 상생, 인적자원 등

Knowledge Ecosystem

지식·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지식생태계 조성

Startup-friendly Environment

우수한 인력들의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고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Trust as a Social Capital

사회·경제주체간
신뢰 형성

High-quality Human Capital

축적된 지식을
창조와 혁신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수한 인적자본
육성



자료 : 방통위 창조경제 TFT, 새정부의 국정방향과 부산의 대응전략(부산발전연구원)에서 재인용



4.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국정목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1.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
2.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3.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4.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5.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6.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7. 세계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8.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9. 고용친화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10.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11.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12.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13.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
14. 수산의 미래 산업화
15.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16. 고령 친화산업 육성
17.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18.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19.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20.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21.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2.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활력 회복
23.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24.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25.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27.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28.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29. 소비자 권익보호
30.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31.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32. 기업지배구조 개선
33.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34.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35.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36. 부동산 시장 안정화
37.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38.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39.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40. 건전 재정기조 정착
41.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1. 새정부 국정과제의 핵심과제 도출

창조산업과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 ▶ 과학기술기반의 융합 신성장 동력 육성 및 산업구조 고도화
 - 문화, 콘텐츠, 소프트웨어, 인문, 예술의 융복합화 / 산학연 지역연계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 ▶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 기반 구축 및 성장동력화
-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정거래 등의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 ▶ 청년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신 성장동력 산업 육성

- ▶ 농림축산업, 해양수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 ▶ 보건, 의료, 웰빙산업, 고령친화산업의 전략적 육성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가 성장거점 육성 및 혁신역량 강화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를 연계한 새로운 성장거점 육성
- ▶ 국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융합형 과학인재 양성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 중소/중견기업 역량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2. 새정부에 대응한 충남의 정책방향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역량 확대

- ▶ 문화, 콘텐츠 등 기반의 창조산업, 서비스산업은 기본적으로 대도시의존형 산업
- ▶ 충남은 제조기반의 수직계열화된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신규 창업벤처 등의 여건이 제약
- ▶ 새정부의 창조산업 육성에 맞춘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의 확대 및 서비스산업 기반 확대 필요

- 도내 대학교의 인적자원에 대한 창조산업의 역량 강화, 산업기반의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 충남의 서비스산업 특화사업 발굴 및 육성
-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

R&D 연계를 통한 신성장동력산업의 네트워크 발전

- ▶ 충남은 농림축산업, 해양수산업 등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만, 성장산업화에는 한계
- ▶ 수도권 및 대전R&D특구와의 기능적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선결

- R&D연구기관과의 지원체계(기능적 역할분담)구축 및 지역 특화 연구부문의 유치
- 고령친화(항노화, 의료)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충청권 연계를 통한 차세대 성장산업화 추진



2. 새정부에 대응한 충남의 정책방향

과학기술 거점기반 조성과 과학기술컨트룰 타워의 역할 정립

-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역할 확대와 대덕R&D특구와 연계 발전
- ▶ R&D - 사업화 - POST R&D를 위한 지역간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
- ▶ 중앙부처별 과학기술 지원에 대한 지역의 통합적 행정 및 집행체계의 정비 필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기능지구간의 예산 및 지원 확대 (특별법 개정)
- 지방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 정립 및 활성화 (R&D예산의 통합 조정 및 기획 등)
- 지역기반의 융복합 산업 육성(예비타당성 사업 확대) 및 지역산업육성정책의 재정비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성장지원

-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 모색
- ▶ 새로운 중소기업으로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 확대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기반 조성(협력기능 강화), 조건부제품구매 제도의 확대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새로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확대

Thank you